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5.(화) 12:00
(지 면) 2026. 5. 6.(수) 조간

2,417억 규모 범정부 정보자원 도입, 행정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집중 투자

- 1차 1,642억 원, 2차 775억 원으로 올해 약 2,417억 원 규모 발주
-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통합구축 사업 추진
- 대전 본원에 대한 투자 최소화 및 재해 복구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직무대리 하승철)은 올해 약 2,417억 원 규모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이하 ‘통합사업’)을 추진하며, 우선 1,642억 원 규모의 1차 통합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통합사업은 정부가 사용할 서버, 정보 처리 장치(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정보자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일괄 구매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것으로, 부처별 개별 구매에 따른 중복 투자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 인공지능 정부 기반 시설 혁신을 반영한 정보자원 도입

이번 1차 통합사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41개 기관의 158개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 총 1,702종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드웨어 706종과 소프트웨어 996종을 일괄 구축하기 위해 통합 발주 5개 사업과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41개 사업으로 나누어 주문한다.

특히, 올해 통합사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의 기반 시설(인프라) 혁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 먼저, 건물 노후화 등으로 2030년 운영 종료 예정인 대전 본원에 대한 신규 투자는 최소화한다.

대전 본원의 G-클라우드 서버 풀 자원 증설은 중단하고 기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스토리지 증설 등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대전 본원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던 16개 시스템은 대구 센터로 이전하여 재배치한다.

>> 재해 복구 체계 강화로 중단 없는 정부 서비스 제공

또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행정 서비스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재해 복구(DR) 체계를 한층 견고하게 다진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우편 정보, 여권 정보, 특허 사무 등의 기존 서버 및 스토리지 기반 재해 복구 시스템을 보강한다. 아울러 백업 센터로의 2차 예비 저장(온라인 소산) 등을 위한 장비 도입을 확대하여 데이터 보존의 안전성을 높인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보자원은 노후 장비 교체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확충, 백업·소산 시스템 보강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신규 업무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현장 소통을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차 통합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5월 12일(화) 천문연구원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누리집(www.ni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승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통합사업은 2030년 대전 본원 운영 종료에 대비하는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각 부처가 필요한 정보자원을 적기에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해 복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석태 (042-250-5900)
		담당자	사무관	동 훈 (042-250-5950)